

“尹 대통령 탄핵해야”... 도내 교수·연구자 125명, 시국 선언

“민의 거스르는 정권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북 지역 교수와 연구자 125명이 의견을 모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한상욱 교수, 교육학과 정재준 박사, 원광보건대 김석준 교수, 우석대학교 최광수 교수 등 5명의 교수가 모여 1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맨 먼저 최광수 우석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위와 답으로 쌓아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며,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약속은 집권 2년 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그는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정상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된 거부권 행사와 타협 없는 태도로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훼손되고, 남북 긴장



전북지역 교수와 연구자 125명이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이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 파괴... 즉각 퇴진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대화·타협의 정신 훼손”

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서 적대의 악순환으로 돌아왔다.”며, “이는 국회의 동의를 무효로 여기고, 국민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검토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태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상욱 전북대 교수는 “외교에서도 살피자 미국과 일본에 굴종적인 자세로 실익도 평화도 기대롭게 만들고 있다.”며, “비관적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검찰 권력과 사법행

정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부도덕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 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회견 모두의 연설에 한 사과조차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이는 통탄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 등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며, “더 나아가 책임자를 추궁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정부의 국치를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통탄했다.

마지막으로 등단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지난해에는 국가 발전의 추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제출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부도덕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북 교수 연구자 모임은 지난 8년 전에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도의원은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공립미술관이 법적 책무를 도외시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도민만을 위한 미술관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과 업무담당자도 지칭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의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문화행정,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외면”

김희수 도의원, 행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13일 열린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행정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의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창작 지원은 비장애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비장애인보다 오히려 더 많다.

이러한 목소리는 실제 입법으로 반영되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었고, 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지원을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총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5,000만원 규모의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인 모임 지원사업을 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200만원에서 450만 원 규모로 공백한 수준이다.

김희수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인색한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도립미술관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도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공립미술관이 법적 책무를 도외시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도민만을 위한 미술관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과 업무담당자도 지칭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의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석 국장은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공립미술관이 법적 책무를 도외시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도민만을 위한 미술관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과 업무담당자도 지칭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의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도의원 “문화유산 행정 학예관의 농단에 놀아나” 질타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고창)이 13일 열린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 학예행정이 학예직 공무원의 농단에 놀아났다고 질타했다.

문화유산 지정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없이 지정 심의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상대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존재 사례가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지조사 보고서가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석 국장은 현지조사 보고서는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현지조사 보고서가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맞느냐”고 물었다.

한편, 문화유산 지정 절차는 지정신청서 접수 이후 제출자료 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및 지정 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해당 학예관의 몰상식한 업무 처리에 대해 자체 감사를 발의 예정이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전북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자치도는 13일 국회의원보좌진에서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16명과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북자치도가 쟁겨 온 주요 예산 항목의 국회 단계 심사 대응을 위한 자서로,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주요 증액 필요 분야가 공유됐다.

이와 더불어, 각 의원실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보좌진들에게는 전북자치도 주요 현안과 협조 요청 사항

이 건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정치권과 도의 공조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림픽 유치가 전북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에 공감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 △전북특별법 개정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선정 등 전북의 현안 사업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선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요청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해야”

김대중 도의원, “국내 국제공항중 가장 작아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 못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현재 계획상의 규모로는 국내 국제공항중에서도 제일 작아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가 규모 확대와 공기 단축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정한 거점공항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상 규모는 활주로 2,500m, 주기능력 5대로, 기존 국내 거점공항 4군데와 비교했을 때 가장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항공사 운용 화물항공기



가 대부분 대형 항공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대형화물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현재의 규모로는 대형화물항공기를 새만금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너무나 현재의 규모는 김관영 지사가 국회의원인 시절에 결정된 것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북자치도 역시 그동안 규모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련 용역을 자체적으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그 누구도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관수 건설교통국장은 규모 결정 단계에서 활주로를 3,200m로 늘려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어느 지자체도 국제공항 같은 큰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자체 논리개발 용역 한번 안 하고 말로만 건의한 경우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가 규모 확대 및 공기 단축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마련해 새만금개발청·국토부·기재부에 먼저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 갑질·공직기강 해이... 총체적 난국

도의회 기획행정위,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등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제41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증인 출석요구해 인사행정의 혁신, 요구,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숙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의 울분을 새겨주고 깊이 각성해 주길 요구했다.

김술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김관영 도지사가 영입한 인사들 대부분이 갑질을 비롯한 여러 구실수에 올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책임 추궁은 커녕 오히려 일부 인사는 산하기관장으로 영전하거나 계속해서 산하기관장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시 녹취록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후 폐기하는 것과 회의록을 비공개 문서로 규정해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자기 식구 챙기기 습관만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전체 공개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람에겐 열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녹취록 또한 보존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김태창 의원(군산1)은 얼마 전 전북자치도 공직사회에 많은 문제에 대해 지사님이 공개사과를 하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인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운영주 의적 인사시스템이 문제점을 피고 고음참가속하는 마음으로 일일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인사위원회는 특성상 보호되어야 하지만 막중한 책임도 있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원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중복 의원(전주3)은 갑질 등 공직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사직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 후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한 사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하루 심사 후 경징계로 감경 결정했기에 대해 이견 감사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또한 도민의 상처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급고 평균 잔액이 1급고보다 2급고가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는 절반수준이며, 2급고에 협력사업비를 늘리거나 환원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자주 국방 실현 위해 AI·첨단 무기기술 강화해야”

민주 정동영 의원,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서

더불어 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7차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13일 개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7차 토론회가 13일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동영 의원은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전무의 발제를 경청하며 AI·모빌리티가 군사 정책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AI의 등장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국방과 안보에 새바람을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내에서 독자적인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형두 의원은 AAM(Advanced Air Mobility)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토부 협력해 수도권 교통 혼잡과 지방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DARPA(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를 예로 들며, 방위사업청과 같은 민간 협력 기관을 통해 AI와 항공 전투 체계를 발전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AI·모빌리티와 국방의 결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처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최형열 현대자동차 팀장은 “자율주행과 AI 모빌리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이 협력하여 통일된 체계를 이루어야하며 현대자동차 역시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였으며, 정부, 학계, 기관, 기업들은 AI 기술을 통한 미래 전장과 모빌리티 시스템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맺으면서 정동영 의원은 “AI의 등장으로 우리 국방과 안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AI 기반 무인 전투기와 자율 전투 시스템이 미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K-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AI 및 첨단 무기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득중 기자